

‘비명’ 당권주자, 이재명 사법 리스크 집중공세

97그룹, ‘방탄용 출마’ 언급 압박
정청래 “허상 리스크 연결” 비호
송갑석 등 최고위원 출마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중 킥오프 경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들어 속도가 붙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 이 고문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두고 이 고문 측과 비명계 간에 뚜렷한 전선이 형성되며 이후 전대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어대명’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구도를 깨야 하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주자들은 이 고문의 당권 장악 시 당이 떠날 부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불가론’을 띄우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1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으로 인정받아야 할 때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사정정국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과 맞물려 이 고문이 당의 지도부로 전면에 나설 경우 당의 역량이 민생위기 대응에 집중되지 못하고 여론에 끌려가리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고문의 출마가)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용’이라는 비판적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이 고문도) 알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비명계에서는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조성됐을 때 전략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있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 대표가 공격을 받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엄호하면 각종 의혹을 막아내기 위해 당 전체가 방탄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친명계는 이 같은 논리를 이 고문을 향한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고문은 자신의 국회 입성을 두고 ‘방탄용’이라고 비난했던 국민의힘을 향해 “물도 안 든 물총으로 협박하고 ‘방탄’ 운운한다”며 “빈 총으로 겁주는 저 집단에 굴복하면 되겠다”라고 한 바 있다.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여론은 실체가 없는

의혹을 이용한 정치적 공세라는 것이다.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강력한 리더십에는 이 고문이 적합하다”고 말한 뒤 “허상을 갖고 리스크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한다”라며 적극적으로 이 고문을 비호하고 나섰다.

이처럼 사법 리스크 등을 고리로 선두 주자인 이 고문을 향한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명 성향인 최고위원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계파 간 대립구도가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전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윤영찬, 고민정 의원에 이어 이날은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민 의원과 광주 시장위원장인 재선의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했다.

이에 맞서 친명계에서는 재선의 박찬대 의원이 금명간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환율 위기 대응 상황 점검 현장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열린 환율 위기 대응 상황 점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하정 KB국민은행 부행장, 남궁원 하나은행 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 부행장, 강신국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당정, 18일 윤 정부 첫 세법개정안 논의

민간 경제활력 제고 초점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가 오는 21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최종적으로 내용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당정은 세 부담 적정화와 정상화로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의 세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직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라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5년 만에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세금 부담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중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중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가격을 과세 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물가 급등기 ‘월급쟁이’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간 기본 틀이 유

지돼 온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손보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검토하고 있으며,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의 세대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대표적인 ‘패널티 과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된 배당소득과세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민주 순회경선, 강원·경북서 시작...내달 셋째 주 호남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순회경선 레이스가 내달 6일 강원 및 대구·경북에서 시작된다.

민주당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 본경선 일정의 가안을 공유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주당은 본 경선을 4주에 걸쳐 주말마다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우선 첫 주에는 토요일인 8월 6일 강원·대구·경북에서, 일요일인 7일에는 제주·인천에서 각각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합동연설회를 진행한다.

둘째 주에는 13일에 부산·울산·경남, 14일에 세종·충북·충남·대전을 순회하고 셋째 주에는

전북·전남·광주 등 호남에서 순회 경선이 진행된다. 이어 마지막 주인 28일 경기·서울 등 수도권 본경선과 함께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 대변인은 다만 “이동 수단 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해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지역위원장으로 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박상언 변호사를 선정했다.

서초구를 지역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인 중·성동갑을 포기하고 ‘협지’를 선택한 홍익표 의원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지지 후보 1순위는 정책·공약”

중앙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

6·1 지방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결정한 최대 요인은 ‘정책·공약’이라는 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차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지지 후보 선택 고려 요인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9.4%가 ‘정책·공약’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정당’ (26.5%), ‘인물·능력·도덕성’ (25.9%) 순이었다.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인물·능력·도덕성’이 고려 요소 1순위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공약’이 앞섰다.

비례대표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정견·정책’ (38.4%), ‘지지한 지역구 후보자와 같은 정당’ (28.1%), ‘비례대표후보자의 인물·능력’ (19.3%) 순이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한 시점으로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 ‘투표일 3주 이상 전’ (27.0%)이,

기초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선거에서는 ‘투표일 1주 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선거별 관심도로는 ‘광역단체장선거’가 74.1%로 가장 높았고, ‘기초단체장선거’ (71.3%), ‘지방의원선거’ (53.1%), ‘교육감선거’ (43.1%)의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29.8%)란 답변이 가장 많았고,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18.1%),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17.5%) 순이었다.

투표 효능감에 대한 조사에서는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64.7%가 동의했고,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는 58.0%가,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45.8%가 각각 공감을 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일부터 22일까지 1:1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합뉴스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air purifier **DK**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